

극지해소식

No.153

30 Sep

www.kmi.re.kr

발행인 조정희 원장

책임 김엄지 극지전략연구실장

감수 한덕훈 글로벌전략연구본부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작성 김주형 전문연구원, 김지영 전문연구원, 박예나 전문연구원
엄단비 전문연구원, 유지원 연구원

담당자 김엄지 051)797-4776 (umjikim@kmi.re.kr)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 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북극이사회/국제기구 | 제9차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 회의 개최 2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 미국 해안경비대, 북극 해역에서 중국 선박 재탐지 4

캐나다 | 캐나다 교통부, 북극 여름 감시 활동 비상대기 체제로 축소 5

캐나다 | 캐나다, 주요 프로젝트 사무국(MPO) 국가 중요 사업 전략 및 구상 7

노르웨이 | 노르웨이, 북극해 연구에 10년간 1조 3천억원 투자 발표 10

러시아 | 북극 지역, '1헥타르 프로그램' 통해 신규 사업 활성화 12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 북극 지역 GDP 6%·수출 10% 차지 - 푸틴, 2027년 단일 제도 제안 13

러시아 | 추코트카 자치구 북방 물자 수송 본격화, 3500톤 화물 하역 완료 14

러시아 | 로스텍(Rostec), 북극 보급용 신형 무동력 바지선 프로젝트 공개 15

덴마크 | 덴마크, 그린란드에 4년간 2억 5천만 달러 지원 약속 16

아이슬란드 | 아이슬란드 상공회의소, 북극 인근 해역 석유 탐사 재개 촉구 17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 미라이 호 마지막 북극 관측 항해 시작 18

프랑스 | 프랑스 외교장관, 그린란드 방문...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 발언 20

남극 소식

미 하원 감독위원회, 미국의 남극 전략 관련 정보 요청 22

극지의 창(窓)

2025년 북태평양 북극 컨퍼런스(North Pacific Arctic Conference) 23

북극과 사람

북극의 변화, 원주민의 대응: 사미족의 순록 유목 변화와 적응 전략 2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본 소식지는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제9차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 회의 개최 (2025. 9. 8.)

〈그림〉 제9차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 회의 중 6개 워킹그룹 발표 모습



글 유지원 jwyoo25@kmi.re.kr

출처: <https://arctic-council.org/news/observer-states-met-in-warsaw-for-arctic-council-engagement/>

<https://www.gov.pl/web/diplomacy/warsaw-format-meets-in-krasinski-palace>

자료: <https://arctic-council.org/news/observer-states-met-in-warsaw-for-arctic-council-engagement/>

지난 9월 9일 폴란드 바르샤바(Warsaw)에서 북극이사회 의장국과 옵서버 국가간 언론 확보를 위한 제9차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 회의(바르샤바 포맷 회의: Warsaw Format Meeting)가 개최되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 회의는 덴마크 왕국이 북극이사회 의장국 직을 최초로 수행한 시기인 2010년 옵서버국 중 하나인 폴란드에 의해 창설되었으며, 이사회 회원국과 옵서버 국가, 북극 원주민간 ‘건설적 대화의 장’으로 역할하는 등 폴란드 외교부 주관하에 창설 이래 15년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2025년 회의에는 케네스 회그(Kenneth Høegh) 북극이사회 북극고위관리 의장(Chair of the Senior Arctic Officials, 이하 SAO 의장), 현 의장국 덴마크 SAO 토르스텐 쾰비 닐슨(Torsten Kjølby Nielsen), 마르친 보사키(Marcin Bosacki) 폴란드 외교부 차관, 피오르트 리흘리크(Piotr Rychlik) 폴란드 남북극 문제 담당 대사, 북극원주민 단체 대표를 비롯 북극이사회 6개 워킹그룹(AMAP, CAFF, EPPR, PAME, SDWG, ACAP), 북극대학연합(UArctic), 옵서버 국가측 전문가들이 온·오프라인 형태로 참석하였다.

북극이사회/ 국제기구

케네스 회그 SAO 의장은 연설을 통해, 동 미팅을 주관한 옅서버 국가 폴란드 정부에 사의를 표함은 물론, 모든 옅서버 국가들의 지식, 파트너십, 국가가 지닌 자원을 통한 이사회로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지속적인 이사회 내 활동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덴마크 왕국 의장 수임 기간 동안 추진할 2025-2027년도 의장국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프로그램 우선 분야인 △북극 원주민과 커뮤니티, △지속가능한 경제 개발 및 에너지 전환 솔루션, △해양, △북극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의장 연설에 이어, 이사회 워킹그룹 활동 및 작업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사라 올스빅(Sara Olsvig) 캐나다 이누이트환극지이사회(Inuit Circumpolar Council, 이하 ICC) 의장이 북극 사회의 건강 및 복지와 관련한 기초연설을 진행하였다. 다음 순서로는, 랄스 쿨러루드(Lars Kullerud) UArctic 총장이 환극지 과학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후, 고시아 스미에섹-라이스(Gosia Smieszek-Rice) AMAP 워킹그룹 부사무국장은 북극 기후변화의 전환점과 글로벌 차원·지역 차원에서의 파급 효과를 중심으로 북극 기후 변화에 대한 AMAP측의 최신 동향 자료를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벤자민 스트롱(Benjamin. Strong) EPPR 워킹그룹 의장은 발표를 통해 북극 산불부터 인프라 취약성, 보건 비상사태에 이르기까지, 환경적·인적 위험 증가에 따른 위기 상황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발표와 연설 전반에서는 옅서버국의 과학적 기여 및 지식 공유 확대 촉진, 북극 관련 국제협력 강화와 거버넌스 참여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북극이사회는 워킹그룹이 다루는 주요 북극 현안 해결 과정에 옅서버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북극 협력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극권 국가 정책



미국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9/05/u-s-coast-guard-monitors-chinese-ships-in-arctic-waters-again/>

미국 해안경비대, 북극 해역에서 중국 선박 재탐지 (2025.9.5.)

미국 해안경비대는 알래스카 인근 북극 해역에서 활동하는 두 척의 중국 선박을 추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부터 이어져 온 관련 움직임의 연장선이다.

8월 31일 라이베리아 선적에 의한 hong Shan Da Xue Ji Di 호가 알래스카의 북극 도시 우트키아그비크(Utqiagvik) 북쪽 약 230마일 지점에서 탐지되었다. 이틀 뒤인 9월 2일, 중국 선적 Ji Di 호가 동일 지역 북서쪽 약 265마일 지점에서 확인되었다.

양 선박은 모두 미국이 주장하는 국제법상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는 구역, 즉 미국의 대륙붕 연장선상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금번 관측은 최근 해안경비대가 8월 베링해 및 추크치해(Chukchi Sea)를 통과하는 중국 선박이 탐지된 이후의 일이다.

당시 관계자들은 이들을 감시하는 방식으로 “presence with presence”, 즉 외국 선박도 감시 대상임을 인식시키고 가능한 경우 소통 시도를 하며, 이들이 미국 수역을 벗어날 때까지 그림자 추적을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안경비대는 빙해 선박인 Healy(WAGB-20호)를 파견해 이들 선박을 추적했으며, Air Station Kodiak의 Hercules HC-130J 항공기도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이 배치는 8월 30일 북극해에서 함께 작전하던 Waesche(WMSL 751호) 및 Healy 호의 공동 순찰 작전에 이어진 것이다. 두 선박과 항공기는 Operation Frontier Sentinel 작전 하에서, 외국 선박의 미국 수역 및 인접해역 출입을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다.

북극 지역 해안경비대 관계자는 이러한 관측을 통해 북부 국경 및 북극 해상 접근로를 통제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며, Healy의 작전은 해안경비대가 더 많은 쇄빙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밝혔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9/22/transport-canada-reduced-to-on-call-arctic-summer-surveillance-documents/>

캐나다 교통부, 북극 여름 감시 활동 비상대기 체제로 축소 (2025.9.22.)

〈그림〉 북극 순찰을 위해 사용하는 Dash 7 항공기



캐나다 교통부는 올해 여름 북극 지역에서의 오염 감시, 멸종위기 고래 보호, 해양 안전을 위한 감시 순찰 활동을 축소했다. 연방 선거 시점과 맞물린 지난 봄, 고위 관계자들은 국가 항공 감시프로그램(National Aerial Surveillance Program, NASP)이 북극에서 반응적 태세(reactive posture)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통부 대변인은 작전상 필요시에만 북부 지역에 파견될 것이라고 하여, 비상 상황에만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통부는 원래 이스라엘 엘빗 시스템즈(Elbit Systems Ltd.)로부터 북극 감시용 Hermes 900 Starliner 드론을 구매할 예정이었다. 이 계약은 2020년 12월에 체결되었으며, 2022년 인도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지 단체들의 서한 운동 등 대중적 압력이 제기되어 구매 취소 요구가 있었다. 이 운동은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공격과 그 이후 이스라엘-가자 전쟁 발발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교통부는 이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하였지만, 이 프로그램이 왜 지연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동안 교통부는 1970년대 제작된 De Havilland Canada DHC-7 (일명

북극권 국가 정책



Dash 7) 항공기를 이용해 지난 20년간 매년 6월~11월 북극 감시활동을 해왔다. 항공기는 누나부트 수도 이칼루이트(Iqaluit)에 배치되었다.

연방정부는 2023년 국가 항공 감시프로그램 항공기를 지원하기 위한 격납고를 이칼루이트에 건설했고, 2025년 비행 시즌을 앞두고 완공되었다. 그러나 문서에 따르면 Dash 7은 항법 장치 고장으로 더 이상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수리 비용의 효율성을 두고 논쟁이 있는 상태이다.

현재 NASP에는 두 대의 Dash 8 터보프롭 감시기가 있지만, 북부 짧은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자갈 활주로 장비(gravel kit)를 갖춘 것은 한 대뿐이다. 교통부는 세 번째 Dash 8을 추가 도입할 계획이나, 이에 따라 북극 감시 임무가 완전히 재개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번 감시 축소는 북극이 지정학적 우려의 초점이 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최근 보고서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북극 정치 안보 관측소(Observatory on Politics and Security in the Arctic)의 2024년 12월 보고서에 따르면, 여름철 항로가 더 항행 가능해지면서 2024년 캐나다 북극 수역을 통과한 선박은 466척으로, 이전보다 많이 증가했다. 북극이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3~2023년 사이 북극 진입 선박 수는 37% 증가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의 정치학자이자 북극 주권·지정학 전문가인 마이클 바이어스(Michael Byers)는 “교통부가 국가 주권과 안보 임무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다. 해상 교통이 늘고 있으며, 위험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는 또한 일부 선박 선장들이 북극의 외진 환경을 이용해 몰래 폐유를 방류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최근 북극의 정치적 중요성이 강조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감시 비행을 축소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출처: <https://www.rcinet.ca/eye-on-the-arctic/2025/07/17/25-research-projects-to-receive-10-8m-funding-from-canadian-arctic-science-network/>

캐나다, 주요 프로젝트 사무국(MPO) 국가 중요 사업 전략 및 구상(2025.9.12.)

캐나다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 사무국(Major Projects Office, MPO)은 국가적 중요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 초기 검토 사업을 발표하였다.

주요 프로젝트 사무국은 정부가 국가적 중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구이다. 주요 기능은 △사업자 및 투자자와의 협력 및 자금 구조 지원, △연방 정부 부처 및 기관 간 조정, △규제 요건 및 승인 과정에 대한 안내 및 명확한 경로 마련, △원주민 권리 보유자들과의 협력과 의미 있는 참여(Indigenous engagement), △프로젝트 개발의 장애 요소 해결을 위한 전략적 지원, △사업 모니터링 및 감독 체계, △프로젝트의 규제 승인 과정을 간소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들 프로젝트는 캐나다 경제를 연결하고 산업을 다각화하며, 수천 개의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닌 사업들이다.

〈표〉 국가 중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시행자 (Proponent)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LNG Canada Phase 2 – Kitimat, BC	LNG Canada	액화천연가스(LNG) 생산량을 두 배로 확대하여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 시설이 될 것. 약 330억 달러의 민간 자본 유치, GDP 기여, 지역 일자리 증가 기대. 저탄소 집약의 캐나다 에너지를 글로벌 시장에 공급
Darlington New Nuclear Project – Bowmanville, ON	Ontario Power Generation	소형 모듈 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4기 중 첫 번째가 완공되면 약 30만 가구에 안정적이고 저비용의 청정 전력 공급.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수천 명의 고임금 일자리 창출. 캐나다를 SMR 기술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Contrecoeur Terminal Container Project – Contrecoeur, QC	Montreal Port Authority	몬트리올 항구의 컨테이너 처리 용량을 약 60% 확대. 무역 인프라 강화, 공급망 효율 제고, 수천 명의 일자리 창출. 또한 AI 역량을 도입하여 물류 체인을 강화
McIlvenna Bay Foran Copper Mine Project – 동중앙 Saskatchewan (SK)	Foran Mining	청정 에너지, 첨단 제조, 인프라 구축에 필수적인 구리와 아연을 공급. 수백 개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해당 광산은 배출량이 낮은 운영 특성을 지닐 것으로 예상



프로젝트 명	시행자 (Proponent)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Red Chris Mine Expansion – 북서부 BC	Newmont Mining & Imperial Metals	광산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하고 연간 구리 생산을 15% 이상 증가. 운영 시 약 1,500명 고용, 건설 시 최고 약 1,800명 고용. 가동 시 온실가스 배출을 70% 이상 감축할 목표. Tahltan Nation 등 원주민 공동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북서부 BC의 잠재력을 개발. 이 프로젝트는 “Northwest Critical Conservation Corridor” 구상에도 포함됨

주요 프로젝트 사무국은 위 5개 프로젝트 외에도 캐나다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추가 전략 분야들을 지정하였다.

- 규제 절차 혁신: 모든 주요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완료까지 2년 내에 검토될 수 있도록 절차를 전환
- 핵심 광물 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 캐나다를 핵심 광물의 채굴 및 후공정 업그레이드 분야에서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 Labrador 지역, BC의 Northwest Corridor, Ontario의 Ring of Fire 지역 등이 주요 타겟
- Wind West Atlantic Energy: 노바스코샤 해안 등지의 풍력 발전 가능성을 활용해 동부 및 대서양 지역 전력망과 연결. 초기 5,000 MW 확보 시 연간 약 24 TWh의 청정 에너지 생산
- Pathways Plus: 앨버타 기반의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 프로젝트와 에너지 인프라를 병합한 사업. 기름 모래(oil sands) 부문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수출 전략과 연계
- Arctic Economic and Security Corridor: 북극 지역의 기반 시설을 국방 및 경제 양면 용도로 설계. 항만, 도로, 활주로, 통신 인프라 등을 건설하여 북극 주권을 강화하고 북부 지역 연결성 확대
- Port of Churchill Plus: Churchill 항만을 업그레이드하고 사계절 운송을 위한 도로, 철도, 에너지 회랑, 쇄빙 기능(marine ice-breaking) 등을 확장. 원주민 지분 참여 확대 등을 포함하여 북부 무역 경로 강화

북극권 국가 정책



- Alto High-Speed Rail: 토론토부터 퀘벡까지 약 1,000 km의 고속철도를 건설하여 최고 시속 300km/h 운행. 이동 시간을 절반으로 단축, 약 63,000 가구 주택 공급 목표 포함, 연간 약 2,500만 톤의 CO₂ 배출 절감, 10년간 약 51,000개의 일자리 창출 목표

투자자, 주(州)와 준주(territories), 그리고 기업계는 캐나다에서 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지나치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해 왔다. 주와 준주, 그리고 많은 원주민 공동체 또한 자신들의 이익과 우선 순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Building Canada Act」를 통해 국가적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방 차원의 심사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적 확실성을 높이고, 자본 유치를 촉진하며, 산업을 강화하고, 원주민 권리를 존중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더 큰 주권과 회복탄력성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에너지와 재화의 생산 확대, 상품·서비스·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을 통해 캐나다의 번영,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국방 및 국가 자율성을 증진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들이 캐나다의 자원, 재화, 서비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할 것이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엄단비 dbu@kmi.re.kr

출처: <https://www.highnorthnews.com/en/norways-high-north-strategy-nok-1-billion-polar-research>

노르웨이, 북극해 연구에 10년간 1조 3천억원 투자 발표 (2025.8.29.)

[그림] 노르웨이 총리 요нас 가르 스토레가 노르웨이 북극대학(UiT)을 방문해 북극해 연구 프로젝트 '북극해 2050'의 대규모 장기적 투자를 발표하는 모습(사진: 아스트리 에드바르센)



자료: <https://www.highnorthnews.com/en/norways-high-north-strategy-nok-1-billion-polar-research>

노르웨이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북극해 연구에 10억 크로네(약 1조 3천억원)를 투자하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 '북극해 2050(Arctic Ocean 2050)'에 전액 정부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요нас 가르 스토레 노르웨이 총리(노동당)는 화요일 트롬쇠에서 "2026년부터 향후 10년간 북극해 연구에 10억 크로네를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며 "'북극해 2050'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적인 북극 연구 국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그 루네 올센 노르웨이 북극대학(UiT The Arctic University of Norway) 총장은 "이번 투자가 노르웨이 및 국제적인 북극 연구에 엄청난 도약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십 년 내 북극해가 계절적으로 얼음이 없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영향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극해 2050'은 노르웨이 전역의 저명한 극지 연구자들을 한데 모아 지리학, 국방 및 안보 정책, 산업, 국제법, 환경, 기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북극권 국가 정책



출처: <https://www.highnorthnews.com/en/norways-new-arctic-strategy-will-be-launched-month>

2026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진행될 이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향후 국가 예산 편성을 보장받았다. 다그 루네 올센 총장은 "정부가 '북극해 2050'에 대해 발표를 기대했지만, 우리가 요구한 그대로 10년에 걸쳐 10억 크로네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발표는 놀라운 도약"이라며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노르웨이를 북극 연구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퇴레 총리는 "정부는 극지 연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지난 5월 8일 발표한 국가안보 전략에서 노르웨이는 북극에서 지식 우위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총리는 북극 지역의 극적인 변화에 대한 더 다양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얼음이 녹고 북극해의 색이 하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면, 커다란 상자가 열린다"라고 비유했다. 그는 "우리는 조금 알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과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퇴레 총리는 북극해 변화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해운과 새로운 무역로가 증가하고, 수산업·관광·기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이라면서도 "자원을 둘러싼 갈등과 경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안보 정책 상황 속에서 북극에 대한 지정학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지식 측면에서 앞서나가야 한다"라며 "변화 중 일부는 멈출 수 없지만, 이를 이해하고 지식을 구축해 가능한 범위에서 발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통찰력과 현장감,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이것이 극지 연구 투자를 단행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스퇴레 총리는 같은 날 외교부 장관과 지방정부·지역개발부 장관이 키르케네스에서 발표한 정부의 새로운 '하이노스 전략(High North Strategy)'도 함께 언급했다.

시그룬 오슬란드 노르웨이 연구·고등교육부 장관은 "노르웨이는 북극에서 명확하게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며, 기후 변화와 북극에서의 기타 변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을 확보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북극권 국가 정책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arctic-russia.ru/news/v-k-rdy-otmetili-polozhitelnuyu-dinamiku-biznes-proektov-na-gektarakh-v-arkti-ke/>

북극 지역, ‘1헥타르 프로그램’ 통해 신규 사업 활성화 (2025. 9. 19.)

러시아 극동·북극 개발공사(The Far East and Arctic Development Corporation)는 북극지역에서 ‘1헥타르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 무료 토지를 기반으로 한 창업 및 사업 프로젝트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개최된 기업가 지원 관련 화상회의에서, 극동·북극 개발공사 투자 프로젝트 지원부의 부국장 엘리자베타 루지나(Elizaveta Luzina)는 “북극권에 속한 지역에서는 무상 토지를 주로 개인 주택 건설에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지나는 북극지역 기업가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강조했다. 그는 “북극지역 거주자(AZRF resident) 지위를 얻는 절차는 서류 준비, 심사 기간, 투자 금액 모두 크게 단순화되었다”며, 최소 100만 루블 규모의 프로젝트부터 등록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글램핑(glamping) 시설이나 소규모 보트 정박소 건설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결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북극지역 내 사업 개발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1헥타르 프로그램’은 2016년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2021년부터 북극지역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이후 이 제도는 러시아 전역에서 정착민 유치와 소규모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시민은 지정된 구역 내에서 최대 1헥타르(10,000 m²)의 토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으며, 개인 주택 건설, 농업, 관광, 소규모 사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토지를 받은 후 1년 안에 사용을 시작해야 하며, 5년 동안 계획에 맞게 개발할 경우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게 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정착을 촉진하고, 에코투어리즘·글램핑·어업·보트 정박소·지역 생산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1: <https://tass.ru/ekonomika/25103649>

출처2: <https://tass.ru/ekonomika/24968737>

북극 지역 GDP 6%·수출 10% 차지 - 푸틴, 2027년 단일 제도 제안(2025. 9. 19.)

러시아 정부가 북극 및 극동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규 투자 프로젝트 확대와 함께 2027년부터 단일 우대제도(preferential regime)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북극지역, 러시아 GDP 약 6%·수출 약 10% 차지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장관 알렉세이 체쿤코프(Alexey Chekunkov)는 9월 19일 모스크바 국가센터 "러시아"에서 개최된 “북극 보고서(Arctic Dossier)”에서 러시아 북극지역(AZRF)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북극 지역은 러시아 GDP의 약 6%와 수출의 10%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중은 자원 집약적인 산업 구조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체쿤코프 장관은 “도시 개발과 비즈니스는 반드시 환경적 복지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러시아가 북극의 취약한 생태계를 존중하면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또, 특별 우대 제도(special preferential regime)와 선도개발구역(territories of advanced development)을 기반으로 1,000개 이상의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 2.5조 루블 이상의 투자가 유치되었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 단일 우대제도 제안

앞서 9월 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9차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27년 1월 1일부터 극동 전역과 북극을 포괄하는 “단일 우대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축적된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투자자의 조건을 유지하면서도 극동과 북극 전체가 연결되는 단일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도가 러시아 북극·극동의 투자 매력도를 한층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xn--80atapud1a.xn--plai/press-tsentr/novosti-chao/plan-severnogo-zavoza-na-chukotke-vypolnen-bolee-chem-napolovinu>

추코트카 자치구 북방 물자 수송 본격화, 3500톤 화물 하역 완료

(2025. 9. 17.)

북극권 추코트카 자치구의 겨울철 대비 필수 물자 공급 프로그램인 ‘북방 수송’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혹한기 동안 필요한 생활·산업 자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추코트카 자치구 정부에 따르면, 화물선 비아체슬라프 아니시모프(Vyacheslav Anisimov) 호가 최근 산업재와 식료품을 성공적으로 하역했으며, 총 219개 컨테이너, 약 3,500톤 규모의 화물을 운송했다. 선박은 현재 다음 화물 수송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으로 향했고, 차기 항차는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계획되어 있다.

현재까지 지역에 공급된 산업재 및 식료품이 총 1만 2천 톤을 넘어섰으며, 이는 전체 계획 물량의 약 55%에 해당해 지역 상점과 사회기관에 안정적 물자 공급이 확보되었다. 동절기 대비에서 특히 중요한 연료 공급도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총 96,700톤의 석유제품이 운송되었으며, 이는 계획의 56% 수준이다. 아나디르 강(Anadyr River)과 칸찰란 강(Kanchalan River) 상류 및 비정규 접안지에 위치한 마을들의 디젤유 수요가 전량 충족된 상태다. 현재 다섯 척의 유조선이 공급을 맡아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석탄 공급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에그베키노트 화력발전소(Egvekinot State District Power Plant)에는 이미 4만 톤의 석탄이 전량 반입되어 겨울 대비가 완료됐다. 차운 화력발전소(Chaun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에는 두 번째 석탄 수송분이 도착했으며, 칸찰란(Kanchalan)·스네즈노예(Snezhnoye)·우스트벨라야(Ust-Belaya)·아뉴이스크(Anyuysk)·에그베키노트(Egvekinot)·프로비데니야(Provideniya)·우엘칼(Uelkal)·엔멜렌(Enmelen) 등 여러 마을에는 필요한 물량이 전부 도착했다. 코네르기노(Konergino)·눈리그란(Nunligran)·시레니키(Sireniki)·르르카이피이(Ryrkaypiy) 지역에도 부분적으로 공급이 완료됐다.

현재 추코트카 해역에서는 네 척의 석탄 운반선이 작업 중이며, 총 3만 3천 톤의 석탄을 하역했다. 추가로 세 척의 선박이 나호트카(Nakhodka) 항을 출발해 추코트카 마을들에 석탄을 공급할 예정이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러시아

글 김지영 전문연구원
jiyeong111@kmi.re.kr

출처: <https://arctic.ru/news/20250919/1048887.html>

로스텍(Rostec), 북극 보급용 신형 무동력 바지선 프로젝트 공개(2025. 9. 19.)

러시아 국영 기술기업 로스텍(Rostec) 산하의 Remvooruzheniye 설계국이 북극 지역을 포함한 내륙 수로 물류 지원을 위해 신형 무동력 바지선(barge) 라인업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화물선단을 교체하고 내수 수송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가지 신규 바지선 모델

프로젝트 1단계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선박이 제안되었다.

- 컨테이너 바지선: 원통형 탱크 20개 또는 표준 20피트 컨테이너 10개를 실을 수 있으며, 화물은 갑판 위와 선체 내부 모두 적재 가능하다.
- 유조 바지선: 석유제품과 화학물질을 운송할 수 있으며, 특히 북극 지역 보급과 같이 물류 여건이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자율 하역 기능과 다목적 활용

두 바지선 모두 항만 장비 없이도 자율적으로 하역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선박 구조는 항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분리·접안해 화물을 내릴 수 있어 전체 선박 편대를 정지시키지 않고도 부분 하역이 가능하다.

새로운 바지선들은 물류 수송 외에도 준설 작업, 하구 정화, 오염수 수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북극항로 적용 가능성

로스텍 측은 향후 이 프로젝트가 북극해 항로(Sevmorput, Northern Sea Route) 운항에도 적합하도록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화물 가열 시스템 설치, 선체의 빙해(氷海) 보호 강화, 자동화 시스템 확대 등이 적용될 계획이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엄단비 dbu@kmi.re.kr

출처: <https://news.az/news/denmark-commits-253-million-to-boost-greenlands-infrastructure-and-healthcare>

덴마크, 그린란드에 4년간 2억 5천만 달러 지원 약속 (2025.9.16.)

덴마크가 북극권 섬 그린란드의 의료와 인프라 지원을 위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16억 덴마크 크로네(미화 약 2억 53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와 옌스 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총리가 코펜하겐에서 서명한 이번 협약에는 동그린란드 이토코르토르밋(Ittoqqortoormiit)의 활주로 신설과 남부 카코르토크(Qaqortoq)의 심해항 개발 등 인프라 사업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또한 덴마크는 앞으로 그린란드 환자의 덴마크 병원 치료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며, 이는 기존에 그린란드 정부가 부담하던 재정적 책임을 이전하는 조치다.

이번 지원금은 그린란드에 매년 지급되는 약 43억 크로네의 무상 지원금에 추가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그린란드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린란드는 최근 주요 산업인 수산업이 새우와 칠성장자미 어획량 감소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와 국영 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또한 경제에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옌스 프레데릭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번 협정은 자립적인 그린란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중에서도 장기적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3월에 출범한 그린란드의 친기업 성향 정부는 경제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덴마크를 장기적인 독립을 향한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다.

이번 발표는 특히 미국을 포함한 외국 세력들이 그린란드의 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석유·가스·희소 광물 자원에 대한 관심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이와 관련해, 덴마크는 이번 주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시작했으며, 이는 그린란드 방위에 있어 덴마크가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미국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도 해석된다.

북극권 국가
산업·경제

글 엄단비 dbu@kmi.re.kr

출처: <https://www.euractiv.com/news/iceland-urged-to-pursue-arctic-oil-exploration/>

아이슬란드 상공회의소, 북극 인근 해역 석유 탐사 재개 촉구 (2025.9.18.)

아이슬란드 상공회의소가 정부에 드레키(Dreki) 지역에서의 석유 탐사를 위한 허가 절차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고 유럽 정치매체 유랙티브(Euractiv)가 18일 보도했다. 드레키 지역은 아이슬란드 동쪽 해상에 위치한 북극 인근 해역이다.

상공회의소는 목요일 발표한 새 보고서에서 드레키 지역에서 60억12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 발견될 경우 그 가치는 50조에서 100조 아이슬란드 크로나(약 3300억에서 6600억 유로)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아이슬란드 시민 1인당 5100만에서 1억200만 크로나(약 34만~68만 유로)의 세수로 이어질 수 있다.

상공회의소는 석유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탐사 허가 수수료와 관련 비용으로 인해 국가 재정에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드레키 지역의 지질 구조는 노르웨이와 유사해 이산화탄소 배출 효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적인 석유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탐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는 향후 과학 연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드레키 지역에 대한 탐사는 1985년부터 노르웨이와의 양자 협정에 따라 간헐적으로 진행됐지만, 2018년까지 모든 탐사 허가가 회수되었다. 당시 참여 기업들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 팔 요한손 아이슬란드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올해 초 정부가 새로운 탐사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 없으며, 아이슬란드의 미래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아이슬란드 국민의 약 46%가 석유 시추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서버 국가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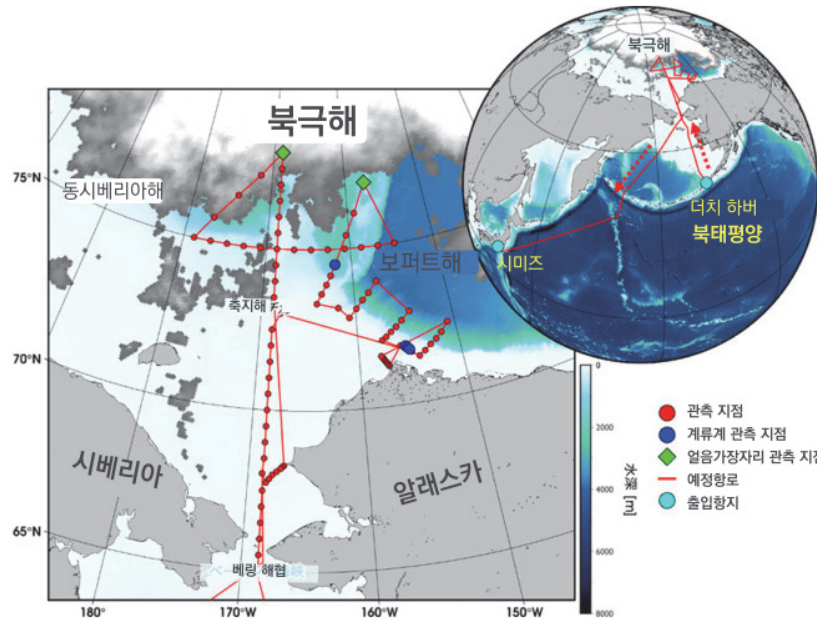
일본

미라이 호 마지막 북극 관측 항해 시작 (2025.9.1.)

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가 보유한 해양지구연구선 ‘미라이’는 북극권 연구 강화 프로젝트(ArCS III)를 위해, 2025년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제23차이자 마지막 북극해 관측 항해를 실시한다.

관측 내용은 주로 전략목표 ①의 연구과제와 관련된 것이지만, 연구 성과와 데이터 발신, 다른 연구 과제와의 연계를 통해 전략목표 ②와 전략목표 ③의 달성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그림 1] 미라이호 북극항해 예정항로



자료: <https://www.jamstec.go.jp/j/pr/info/20250901/>

1997년 10월 취항 이래, 일본 해양관측의 기함으로 활동한 미라이호는 올해 임무를 마지막으로 퇴역한다. 지금까지 22차례 북극해 관측을 수행해왔으며, 8월 31일 알래스카 더치하버에서 시작하는 마지막 북극 항해를 수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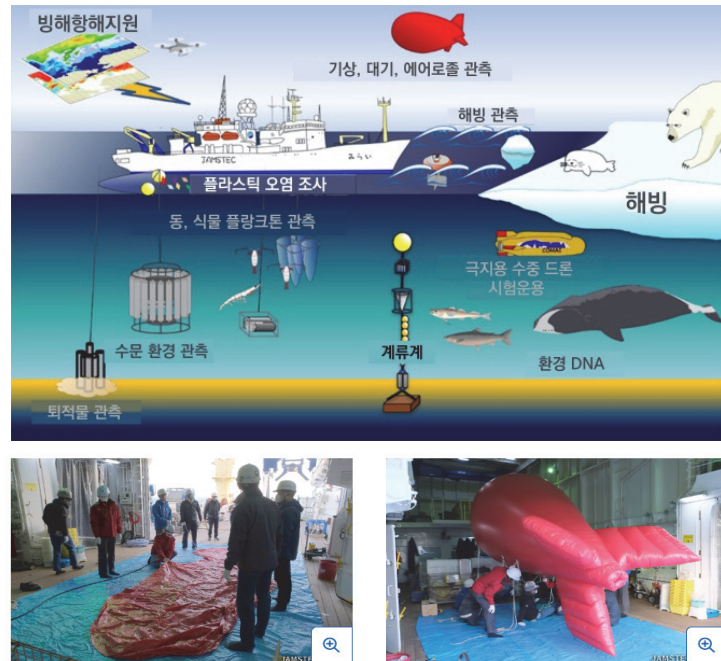
이번 북극 항해에서는 기초 해양 데이터(수온·염분·산소·영양염 등) CTD 관측을 비롯해, 그물과 수중 카메라를 활용한 동식물 플랑크톤 조사, 환경 DNA를 이용한 침단 생물 조사, 극지까지 확산되는 플라스틱 오염 연구 등 기존 북극권 연구 프로젝트(ArCS, ArCS II)에서 이어져 온 다양한 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관측용 계류기구를 띄워 기상·대기 관측을 실시하는 등 미라이 특유

옵서버 국가 정책

 일본

의 관측 활동과 차세대 자동 해양관측 장치로 주목받는 극지용 수중 드론 ‘COMAI’의 시운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그림 2] 항해 관측 개요 모식도(위)와 관측용 계류기구(아래)



자료: <https://www.arcs3.nipr.ac.jp/report/3220/>

미라이호는 쇄빙 기능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국립극지연구소 북극권 데이터 시스템(ADS)과 (주)웨더뉴스의 협력을 통한 전용 해빙·기상 예보 지원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태평양 측 북극해 입구에서 빙해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선상 모습 일부는 LIVE로 중계된다.

미라이호는 이번 북극 항해를 마친 뒤, 10월에 시즈오카시 시미즈항으로 잠시 귀항해, 그 후 일본 해구와 쿠릴-캄차카 해구에서 조사를 수행한 뒤, 연내에 운용을 종료할 예정이다.

JAMSTEC은 후속 선박인 ‘미라이 2’를 건조 중이며,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옵서버 국가 정책



프랑스

글 유지원 jwyoo25@kmi.re.kr

출처: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50831-greenland-is-not-for-sale-french-foreign-minister-visits-arctic-territory-in-show-of-solidarity>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50831-french-foreign-minister-expresses-solidarity-on-greenland-trip>

<https://www.hignorthnews.com/en/french-foreign-minister-nuuk-france-stands-greenland>

<https://www.hignorthnews.com/en/denmark-and-greenlands-message-us-any-attempt-interference-unacceptable>

<https://www.france24.com/en/live-news/20250831-french-foreign-minister-expresses-solidarity-on-greenland-trip>

<https://www.sermitsiaq.ag/samfund/vivian-nu-skal-samarbejdet-konkretiseres/2276281>

프랑스 외교장관, 그린란드 방문…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 발언 (2025. 8. 31.)

〈그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자치정부 외무장관의 그린란드 회동 장면

자료: <https://x.com/jnbarrot/status/1961896263441420496>

지난 6월 에마누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이 덴마크 왕국 자치령 그린란드에 전격 방문한데 이어, 장-노엘 바로(Jean-Noë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이 그린란드 수도 누크(Nuuk)에 방문하였다. 장관은 그린란드 방문 계기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린란드 방문 당시 강조하였듯 “그린란드는 판매용이 아니며, 유럽과 프랑스는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지지한다”고 언급하며, 그린란드와의 연대를 공고히 했다.

이와 같은 프랑스 정부 인사의 연이은 그린란드 방문과 연대 표명은, 그린란드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겠다고 발언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읽힌다. 또한 프랑스 외무장관의 방문은 덴마크 공영 방송 DR이 8월 27일 덴마크 정부 및 기관, 미국의 복수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 미 대통령과 연관된 미국인 3인 이상이 그린란드에 비밀리에 침투하려 한다고 보도한 직후 이루어졌기에 그 시기와 적기성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장-노엘 바로 장관은 그린란드 방문 계기 옌스-프레데릭 니엘센(Jens-Frederik Nielsen)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 비비안 모츠펠트(Vivian Motzfeldt) 그린란드 외무장관과의 회담을 진행했으며, 회담 결과로 양국간

옵서버 국가 정책



협력의 구체적 결과 보장을 위해 ‘프랑스-그린란드 파트너십 대화를 위한 위원회(French-Greenlandic committee for partnership dialogue)’ 설립에 합의했다. 또한 장-노엘 바로 장관은 2026년 초 그린란드에 주그린란드총영사관을 개설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을 선언했다.

이 밖에, 장-노엘 바로 장관은 누크에 정박한 프랑스 군함 BSAM 가론(Garonne)호에 탑승하는 일정을 소화하며, 프랑스 정부는 덴마크 및 NATO 동맹국들과 함께 북극 지역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이라는 전략적 지역에서 자유로운 항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세트미르시아크(Sermitsiaq)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 외무장관의 그린란드 방문 및 프랑스-그린란드 양국 협력 발전에 크게 만족하고 있으며 양국간 미래 협력 관계를 지속화하기 위해 공식적 협력 협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뿐만 아니라, 북극의 낮은 긴장 상태를 전적으로 지지하고는 있으나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현 상황 하에서는 그린란드 안보를 위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므로, 프랑스를 비롯한 NATO 동맹국들, 그리고 지리적으로 비북극권에 속하는 동맹국들이 그린란드 방위 활동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첨언했다. 실제로 덴마크 왕국과 그린란드는 캐나다,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페로제도 등 북극 연안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북극 훈련을 주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어, 훈련 결과에 따라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한 북극권 안보 합동 훈련이 정례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남극소식

미 하원 감독위원회, 미국의 남극 전략 관련 정보 요청
(2025.8.26.)

미 하원 감독·정부 개혁위원회(House Committee on Oversight and Government Reform)는 남극에서 미국의 국가 이익 및 연구 우선순위를 추진하는 연방 기관 간의 권한 조정에 대해 감독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켄터키주 공화당 소속 제임스 코머(James Comer) 위원장은 미 국무부와 국방부에 서한을 보내, 남극에서의 미국 전략을 평가하고 미국의 이익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브리핑을 요청했다.

서신에는 국무부와 국방부의 역할은 미국의 남극 주둔 장기적 지속성에 필수적이며,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남극조약 체제와 남극에서 미국의 존재를 보호하는 과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무부의 남극조약 체제의 이행 계획과, 국무부와 국방부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존재 확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했다.

중국은 남극에서 존재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으며, 현재 5개의 연구기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제6기지 개설 계획이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연중 상주 기지 3곳만 유지하고 있다.

위원회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모든 연방 정부 연구 보안 문제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공산당은 남극을 새로운 전략적 전초기지로 간주하며, 극지 강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남극 진출 확대가 군사적 목표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국제질서를 재편하고 2048년 남극조약의 잠재적 개정을 겨냥하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화도 일치한다고 경고했다.

코머 위원장도 중국 공산당이 극지 지역에서 군사적 의도를 드러냈음을 지적했다. 또한, 남극 자원의 착취 가능성도 강조되었다. 남극 대륙에서는 약 5,000억 톤의 석유, 3,000억~5,000억 톤의 천연가스 그리고 남극해 인접 지역에서 1,350억 톤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미국의 남극 전략을 평가하고 미국의 이익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무부와 국방부는 직원 차원의 기관 간 브리핑(Staff-level, inter-agency briefing)을 제공할 것을 요청받았다.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https://oversight.house.gov/release/oversight-committee-seeks-information-on-u-s-strategy-in-antarctica-amid-rising-presence-of-foreign-adversaries/>

박예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극지전략연구실 전문연구원

글 박예나 yena719@kmi.re.kr

2025년 북태평양 북극 컨퍼런스(North Pacific Arctic Conference) - 북극 예외주의의 퇴색과 제약 속 실용주의로의 전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하와이대학교 동서문화센터(East West Center, EWC)는 8월 21~22일까지 하와이 EWC에서 2025년 북태평양 북극 컨퍼런스(이하 NPAC)를 공동 개최했다. NPAC은 2011년부터 매년, 북태평양 관점에서 북극 이슈를 조망하고 북극·비북극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해 온 정책·학술 플랫폼이다. 회의는 Chatham House Rule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본 글도 발언자 실명 없이 논의의 흐름과 함의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금번 NPAC은 지난 30-40년간 북극 거버넌스를 이끌어 온 정책 내러티브의 효용과 한계를 점검했다. 냉전 종식 이후 북극협력을 견인했던 “평화지대(Zone of Peace)”와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의 서사가 더 이상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자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적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의 연속성과 성과를 축적할 수 있다는 신중한 낙관론이 공존했다.

1. 북극 내러티브의 변화

정책 내러티브는 의제를 해석하고 행동을 조직하는 강력한 도구다. 1990년대 이후 북극은 환경보호·지속가능발전·원주민 권리·과학협력의 공간으로 부상했고, 1996년 북극이사회출범과 작업반 보고서가 이러한 흐름을 지지했다. 당시에는 현실과 서사가 비교적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정학·경제·기후 환경이 급변하면서, 예외주의 서사의 전제와 현실 사이에 불일치가 생기게 되었다. 러시아-서방의 긴장 관계, 기후위기 가속, 비북극 이해당사자의 급증, 팬데믹과 전쟁이 촉발한 제도적 긴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북극이사회 전략계획(2021-2030)은 “2030년의 북극은 평화·안정·협력의 지역”이라는 비전을 제시했지만¹⁾, 2022년 이후의 정세는 그 선언과 현실 간 간극을 확대시켰다. NPAC에서는 이를 두고 ‘북극 예외주의의 퇴색(eclipse)’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2. 지정학: 안보화 담론과 ‘최소 협력선’의 유지

2025 NPAC 논의에서 가장 선명했던 메시지 중 하나는, 오늘의 긴장 고조가 북극 내부 요인 못지않게 타지역 갈등의 투영이라는 점이었다. 북극에는 해결 불가능한 영토분쟁이 거의 없고, 군사력의 밀집도도 제한적이며, 우발 충돌을 피하려는 관행이 여전히 작동한다. 그럼에도 언론·대중의 관심이 안보화(securitization) 담론에 쏠리면, 자원·환경·과학·안전 같은 비군사 의제가 뒤로 밀리기 쉽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군사 활동의 투명성 제고, 위험관리 규칙의 제도화, 그리고 무엇보다 비군사 협력의 최소선을 유지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와 상호운용의 복원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가능한 협력을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것이 핵심이라는 인식이다.

3. 기후변화와 적응(Adaptation): 빙권의 전환

기후 과학자들은 과거 여러 전망이 보수적이었음을 지적하며, 오늘의 변화는 단순한 온난화가 아니라 빙권(cryosphere)의 수역(water)으로의 전환이라는 질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 전환은 해수면 상승, 산성화, 종 이동 등으로 이어지며 전이점에 대한 우려를 키운다고 보았다.

동시에 북극 주민의 삶을 기후 하나로만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거·의료·교육·생계비·일자리 같은 생활 의제가 훨씬 절실하다는 체감이 강하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적응은 마을 이전·인프라 보강을 넘어 지역 역량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원주민 지식(Indigenous Knowledge)과 과학 데이터의 결합, 현장-원격 혼합 관측과 조기경보 체계로 설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4. 자원 개발: ‘삼중 균형(Triple Balance)’의 기준

자원개발을 둘러싼 낙관과 우려는 늘 교차한다. 외부에서 만들어진 ‘자원 보고’ 서사는 현장의 사회·생태·실행 가능성과 마찰을 빚기 쉽다. NPAC는 사회적 라이선스(Social License)와 권리 보유자와의 이익공유·책임분담이 실제 성패를 가른 사례를 짚었다. 정책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EIA)의 정량·장기 평가와 사후 모니터링, Polar Code의 블랙카본·소음·생물 교란 등 환경 모듈 보완

이 강조됐다. 결론적으로, 경제성·환경성·사회적 수용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삼중 균형’이 앞으로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였다.

5. 북극항로: ‘짧은 길’의 신화와 목적지형 운송의 현실

해빙 감소로 항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업적 항해의 제약은 여전하다. NPAC은 NSR·NWP·TSR 가운데 현재 실현 가능한 것은 계절적·소규모의 목적지형(destinational) 운송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러시아 규제·제재, 보험·인증·채빙 비용, 안전 리스크가 상업성을 압박한다.

따라서 대규모 환북극 통과항해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며, 비상시 보조·우회 항로 개념과 함께 사전 영향평가·인프라·통신·구난 체계를 먼저 갖추는 기초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6. 과학협력: 상징을 넘어 ‘사용자 지향’으로

과학 외교는 정치 개선의 도구라기보다 결과의 상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냉정한 평가가 있었다. 그럼에도 개인 네트워크, 장기 관측망, 데이터 상호운용성은 정치적 충격을 견디고 협력을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팬데믹과 전쟁 등으로 러시아 현장 데이터에 대한 공백이 커졌고, 원격 대체는 품질 저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공백을 메우려면 현장-원격 혼합 설계,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정합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5차 국제극지연구의해(IPY-5, 2032~33)를 협력 재점화의 이정표로 삼자는 제안이 주목됐다.

7. 거버넌스: ‘복합-상호작용-적응’의 설계

회의의 결론은 실용적이었다. 하나의 ‘북극 조약’을 상정하는 거대 설계는 현실성이 낮다고 보았다. 반면 Polar Code의 부분적 확장, CAOFA(중앙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의 보완, BBNJ와의 관계, NEAFC(북동대서양어업위원회)·OSPAR(북대서양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협약)·PICES(북태평양

해양과학기술기) 등 지역기구의 보강 같은 이슈별·점진적 합의는 실질적 진전을 낼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북극이사회는 정상외교가 위축되었더라도 작업반 레벨의 평가·모니터링·이슈 식별 기능이 여전히 유효한 플랫폼이다.

핵심 키워드는 상호작용의 관리(Interplay Management)이다. 서로 다른 제도·규범·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관리해 상충을 줄이고 시너지를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범은 신속하게 부분적으로 자주 업데이트 하고, 과학·표준·데이터는 정치로부터 분리해 보존하며, 원주민·정착민·산업 이해관계자를 동시에 포섭하는 운영 원칙이 제시됐다.

8. 통합 프레임: 제약 속 실용주의

요컨대 NPAC는 예외주의 서사의 퇴색을 확인하고 '제약 속 실용주의'라는 작동 내러티브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는 큰 하나의 조약을 기다리는 대신, 작은 다수의 합의를 모듈화해 연결·축적함으로써 정치적 제약 하에서도 성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자는 운영 철학이다. 이 접근은 비군사 협력의 최소선을 지키면서 안보·환경·경제·과학의 교차점에서 현실적 진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의 실질적 컨센서스로 부상했다.

결론적으로 NPAC 참가자들은 북극을 이해하는 이야기의 틀이 바뀌고 있다고 보았다. 예외주의의 시대가 저물어도 협력의 공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그 협력은 작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정치의 파고를 건디는 분산형 구조 속에서 성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장된 내러티브를 경계하고 현실과 정합적인 실용주의를 선택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 "In 2030 we envision the Arctic to remain a region of peace, stability and constructive cooperation, that is a vibrant, prosperous, sustainable and secure home for all its inhabitants." (Arctic Council Strategic Plan 2021-2030. <https://arctic-council.org/explore/goals/>)

북극과 사람

북극의 변화, 원주민의 대응: 사미족의 순록 유목 변화와 적응 전략

글 김주형 전문연구원
jhkim7664@kmi.re.kr

■ 들어가며

- 북극은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 수천 년 동안 원주민 공동체가 정주하며 고유한 삶의 방식을 이어온 생활공간이다. 그러나 기후 변화, 산업 개발,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북극 원주민의 삶은 급격한 전환과 적응의 국면에 놓여 있다.
- 이하에서는 그 첫 번째 사례로 유럽 북부 전역에 걸쳐 거주하며 순록 목축을 중심으로 살아온 사미족(Sámi)의 변화와 적응 전략을 통해, 북극 원주민의 생활상 변화를 살펴본다.

■ 사미 족 순록 목축업자: 북극 개발과 기후변화로 변화된 생계

- 사미 족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북부에 걸쳐 거주하는 북극권 원주민으로, 순록 유목(Reindeer herding)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해왔다. 순록은 사미 문화의 핵심으로, 식량, 의복, 교통, 의례 등 전통생활 전반에 걸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유목은 계절별로 방목지와 이동 경로를 따라 순환하며 진행되고, 가족 단위의 공동체가 유목 공동체를 형성한다. 순록 사육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사미의 언어, 구전 전통, 생태 지식과 직결되는 문화적 정체성의 핵심 기반이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기후변화와 산업 개발이 순록 유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 겨울철 기온이 급상승한 뒤 눈이 얼어붙는 ‘바크 아이스(bark ice)’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순록이 지표의 이끼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 순록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름철 폭염과 이상 고온으로 인해 순록의 체중 증가가 어려워졌으며, 기상 불안정성의 심화로 이동 및 방목 시기를 예측하기도 점점 더 힘들어졌다.
- 지역 개발로 인해 순록의 전통 방목지와 이동 경로가 희토류·철광석 광산 개발과 인프라 건설로 훼손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로, 철도, 풍력발전소의 설치가 이동 경로를 차단하고, 무허가 벌목과 관광 개발은 생태계 단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림 1 순록 이동 경로를 가로막는 스웨덴 키루나 광산 개발 예정지



자료: <https://www.euronews.com/green/2025/09/08/sami-reindeer-herders-in-sweden-face-cultural-collapse-amid-mining-and-climate-threats>

-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유목 경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우회해야 하면서 순록의 체력 소모와 폐사가 증가하고, 이동 시기 지연과 방목지 부족으로 번식률이 저하되었다. 이로 인해 순록 사육 수익이 줄어들고 생계 기반이 축소되면서 일부 가구는 다른 직업을 병행하게 되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는 순록 유목을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거나 비정규 노동에 의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더불어 유목과 함께 전승되어 온 사미 언어, 구전지식 등의 계승도 약화되고 있다.

■ 사미 순록 목축업자 적응 전략

- 기후 변화로 인해 겨울철에 비가 내린 뒤 땅이 얼어붙어 순록이 자연 상태에서 먹이를 파서 먹기 어려워지는 일이 잦아졌다. 이에 따라 많은 사미 목축자들은 겨울철에 순록에게 보조 사료를 직접 급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자연방목 방식에서 벗어난 형태지만, 순록의 생존률을 높이고 무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간주된다. 다만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자연 순환 기반 생태문화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 사미 목축업자들은 세대 간 전승된 전통 생태 지식을 바탕으로 이동 경로와 계절별 일정을 조정해왔으며, 최근에는 기상 데이터와 기후 서비스(climate services)도 병행해 활용하고 있다. 기상예보, 식생 변화, 해충·질병 확산 경로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전통적 지식과 접목해 더 정교한 유목 일정을 짜는 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연구자들과 공동 모니터링을 통해 방목지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림 2 겨울철 순록 사료 급여



자료: <https://www.nibio.no/en/news/climate-change-and-land-use-threaten-sami-reindeer-husbandry>

- 사미 목축 공동체는 정부와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진행하는 풍력발전소, 광산, 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전통 방목지와 유목 경로가 훼손되는 것에 대응해, 사미 권리 보장과 사전 동의(FPIC)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다. 사미 의회와 사미 협의회(Saami Council)는 관련 인허가 과정에 원주민 참여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 인권 기준을 토대로 법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전이 아닌 문화권과 생계권 보호 차원의 대응이다.
- 환경 변화 속에서도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목축 시기의 유연한 조정, 전통 기술의 디지털 기록화, 언어 보존 프로그램, 청년 대상 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은 공동체 차원의 회복력(resilience)을 키우는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미 공동체는 예술·관광·교육과 연계한 ‘순록 문화 기반 활동’을 통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시도도 진행 중이다.

<출처>

Saami Council, 『Climate Change in Sápmi – an overview and a Path Forward』, 2023.

<https://www.reuters.com/world/europe/climate-changes-sami-herders-need-feed-reindeer-rain-creates-ice-layer-2024-04-04/>

<https://www.nibio.no/en/news/climate-change-and-land-use-threaten-sami-reindeer-husbandry>

<https://www.saamicouncil.net/en/climate-change-in-sapmi>

<https://www.euronews.com/green/2025/09/08/sami-reindeer-herders-in-sweden-face-cultural-collapse-amid-mining-and-climate-threats>

Saami Council, Amnesty International, 「Just Transition or ‘Green Colonialism?’」, 2025.

<http://www.koreapolarportal.or.kr/>

KMI 홈페이지-정기간행물-
극지해소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연구정보](#)
[동향정보](#)
[세미나](#)
[KMI소식](#)
[KMI소개](#)
[고객서비스](#)
[정보공개](#)
[국무 신장](#)
[ENGLISH](#)

동향정보

- ▣ 구독 신청
- ▣ 발간 간행물

- ▣ KMI 국제물류워클리
- ▣ KMI 주간 해양시정포커스
- ▣ KMI 주간 주요수산물 수급리포트
- ▣ IMO 국제해사 경책동향
- ▣ 아시아오션리포트
- ▣ **극지해소식**
- ▣ KMI 북빙물류리포트
- ▣ KMI 동향분석
- ▣ 항만과 산업
- ▣ KMI 항만 서비스 지표
- ▣ 국제해양장사리포트
- ▣ 해양수산업 기업경가심사자수
- ▣ KMI 인모그래픽
- ▣ KMI 북한 해양수산리뷰
- ▣ KMI 해운시황보고서
- ▣ Position Paper

- ▣ 중간 간행물

극지해소식

▣ 극지 동향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동향정보지입니다.

번호	호수	발행일	조회 / 다운로드	파일
99	제134호	2024-04-30	72 (56)	
98	제133호	2024-03-29	116 (78)	
97	제132호	2024-02-29	105 (105)	
96	제131호	2024-01-31	92 (61)	